

광산구민들, 어등산 골프장 우선 개장 반대 왜

“광주시, 테마파크 동시개장 원칙 깼다”

광주 광산지역 주민들이 어등산 관광단지 내 ‘골프장’의 우선 개장을 반대하는 것은 ‘공익시설 개발’이라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5년 광산구 운수동 일원 273만㎡ 부지에 2015년까지 3400여원의 민간투자를 받아 테마파크와 특급·가족호텔, 체육시설(골프장 27홀) 등을 만들겠다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1951년부터 44년간 포사격장으로 사용됐던 곳으로, 삼성건설이 (주)어등산리조트란 이름으로 민간투자사업자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이후 광주도시공사를 내세워 지난 2008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당시 전체 사업부지 273만㎡ 가운데 사유지 142만3000㎡(주민 297명)에 대한 토지보상을 베풀었다.

하지만, 71만8512㎡를 보유한 89명의 주민이 협의매수를 거부했고, 시는 공익성을 들어 토지수용 절차를 밟았다.

당시 토지 소유주들은 “시가 토지 매수를 위해 도시공사를 민간사업자와 공동 사업자로 끼워넣은 것은 특별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다”라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지역건설업의 침체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실제 사업자가 삼성→글

■ 어등산 관광단지 조감도



광→모아→금광으로 사실상 4번이나 바뀌는 과정을 겪게 된다.

최종 사업자인 금광기업은 지난 5월 광주시에 자금난 등을 들어 골프장 우선 개장을 요청했으나 무산되자, 결국 시를 상대로 골프장 허가기한에 따른 영업손실배상과 사업자명의변경소송 등을 내기기에 이른다.

이때만 해도 시의 입장은 확고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애초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인 만큼 테마파크와 골프장이 동시에 개장돼야 한다”며 원칙을 고수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 9월 어등산개발 사업자는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시에 기부하고 골프장(27홀) 운영시 대중제(9홀) 수익을 사회복지·장학재단에 기부토록 하는, 사실상 골프장 우선 개장을 허락한 강제결정 조정안을 내놨다. 광주시가 이 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골

■ 시민휴게시설 당초 계획도



프장만 우선 개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광산구의원은 “주민들을 위한 공익시설과 골프장을 동시에 개장하겠다는 협약을 내세워 지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 것 아닙니까”면서 “이러한 협약이 깨지고,

골프장만 개장한 것은 엄연히 위법 적 요소가 있는 만큼 주민들과 함께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토지 환매소송 등 법적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산구민들, 지역 정치권과 전쟁 선포

시민단체, 4개월째 파행 구의회 정상화 촉구 성명

광주 광산구 구민들이 구의회의 장기 과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역 정치권 인사를 죄송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자질 미흡 의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24일 광산시민연대를 비롯한 광산구 31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은 시민연대 사무실에서 “구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4개월째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구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구의회 파행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의정비를

의원들 스스로 반납할 것 ▲자질 없는 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할 것 등을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촉구했다.

특히 해당 단체들은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구의회의 이 같은 과행에 수수방관하며 도리어 내부 과정 조성을 부추기고 있다”며 “조속한 구의회 정상화를 위해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광산구의회가 ‘갑’ 선거구인 김동철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을’ 선거구 이용섭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의원들로 나뉘어 심각한 반목과 갈등

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시민연대 배영모 수석대표는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나몰라라 하면서 유권자인 구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구의회 파행을 비롯해 어등산골프장 문제 해결에 의원들이 밭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이 같은 구민들의 비난에 따라 지난 22일 주류족과 비주류족 의원들이 모여 구의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운영위원회 구성은 놓고 또다시 마찰을 빚어 비주류족 운영위원 4명이 전원 사퇴를 제출하는 등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승렬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여부가

12월 결정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12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무등산이 걸쳐 있는 광주 동구, 북구, 전남 담양군, 화순군 등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산림청과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용역을 거쳐 최근 약 78㎢에 달하는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무등산 국립공원 12월 결정된다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여부가

12월 결정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12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무등산이 걸쳐 있는 광주 동구, 북구, 전남 담양군, 화순군 등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산림청과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용역을 거쳐 최근 약 78㎢에 달하는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신용카드 한도 구매

사용한도만큼 현금으로!

상품권 매매 매입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법인 개인 출장가능!

현금필요하신분

3분이내 즉시해결!

H. 010-2082-6353

TEL. 062)383-6364

한국공인중개사

부동산투자 경매 일반투자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 교육비없음)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율 보장)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율 보장)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대지, 전, 담, 입야 매매 신속처리

기증묘지, 남골묘, 선산, 농장,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임야등 아파트, 원룸, 상가 다양한건물보유

20년 원조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아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서구청암) 광주 서구 능성동 641-5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첨단2지구 토담빌딩 상가·분양 임대

“8,000세대 독점상권 선점가능”

- | | |
|------|----------------------|
| 1층 | 농협, 카페베네, 편의점 입점 확정 |
| 2층 | 보험, 증권사, 호프, 병·의원 |
| 3~5층 | 전문클리닉, 한의원 |
| 6~7층 | 전문학원 |
| 8층 | 패밀리레스토랑, 스카이라운지, BAR |

준공
완료



시공 | 네이버 카페이서 hankookland로검색

휴로스 도시형생활주택

하남지구 최초 명품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총 118세대 (5TYPE / 41㎡~65㎡)

“1층 상가 분양완료”

“소액투자에 정답 5천만원 소형아파트 2채 가능”



TODAM huros Premium 도시형생활주택

수원 차기 | 하남 대교 | 광주 광장 |

광주 광장 | 광주 광장 |

광주 도시공원 85% 사라질 위기

‘공원일몰제’ 영향…2020년 7월까지 토지매입·조성해야

오병윤 의원 “중앙공원 등 국가·지자체 공동 조성 필요”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중앙공원(약 90만평)도 토지매입 및 조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라지게 됐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조성 관리를 하는 국가도시공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환경생태보전 및 종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및 홍수 등의 재해와 대기 및 수질 오염과 같은 도시환경문제 해결에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도시공원 조성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이관됨에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춘진 의원 전남 친환경 농업 흔들…인증 취소만 5천건

전남도 핵심 정책인 친환경 농업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친환경 농업의 외형만 늘렸고, 세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탓이다.

또 친환경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해 친환경 인증 농가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전남도 친환경 농업의 구조적인 개선이 절실히 상태다.

24일 김춘진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사후 관리조사를 한 결과 4840 농가는 인증 취소나 표시사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0년 인증취소된 2155 농가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취소 대상 면적도 4570㏊로 2010년 2423㏊의 1.9배 늘었다. 전국 취소 건수 9155건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이는 전남도가 무리하게 친환경 인증 면적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전남도는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 직불제, 단지조성비, 유기질 비료 등 각종 농자재와 보조금 지원 등을 올해만 32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제조제 등 농약사용 농가가 2093 농가, 영농기록 미작성 1713 농가, 화학비료 사용 107 농가 등 행정 처분 농가의 85.9%인 4157 농가가 인증이 취소됐다. 97 농가는 친환경 인증 사용정지를, 586 농가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지난 2010년 인증취소된 2155 농가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취소 대상 면적도 4570㏊로 2010년 2423㏊의 1.9배 늘었다. 전국 취소 건수 9155건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이는 전남도가 무리하게 친환경 인증 면적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전남도는 친환경 인증 면적을 많아지도록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외형만 늘리지 말고, 유통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고 인증 농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종 보 사이 저수로에 쓰인 쓰레기는 전체의 35%인 139t이었다.

보 구간의 쓰레기 처리를 맡은 수자원공사는 “강 중심부에 가리앉은 쓰레기는 손을 대지 못하고 유속이 느려지는 보 주변이나 곡선형 구간의 둔지 비탈면 등에서만 수거할 수밖에 없다”며 강 중심부의 쓰레기가 퇴적될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